

5개월만에 원점 돌아간 '춤 조례'

화재로 34명 사상 뒤 광주 서구의회 조례폐지 나서 식약처 표준안 기반 개정안도 부결...5개월 헛바퀴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모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로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폐지 여론이 일었던 '춤추는 조례'가 5개월여 동안 개정과 폐지 논의만 반복하다 결국 부결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조례의 혜택을 받는 업소가 단 2곳뿐이라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논란이 있다고 무조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여론이 맞서기 때문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27일 광주 한 클럽에서 불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클럽은 무자격 시공업자가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개축했지만 단 한 차례도 안전관리를 받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이런 불법 영업장이 활발히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광주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목됐다.

사고 당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서구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조례가 불법 영업의 배경으로 지적되면서 2016년 7월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서구의회 등이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업주는 설계를 신고할 의무도 없었고 모든 안전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탓에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도 벗어나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 해당 조례의 혜택을 받는 업소가 단 2곳뿐이라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8월6일 광주 서구의회는 사고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의결기관인 서구의회는 조례를 직접 폐지하지 않고 같은 달 30일 서구에 '춤추는 조례'의 폐지 권고안을 보냈다.

서구의회는 조례 운영기관인 서구청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폐지권고를 보냈지만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다시 '조례 폐지' 공은 서구로 넘어가게 됐다.

공을 넘겨받은 서구는 고민이 깊었다. 폐지를 하면 현재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1개 업소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했고,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면 소송에 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서구청은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장 업주와의 간담회를 열고 행정적·법률적 검토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지난해 11월12일 조례 개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서구청은 식약처에서 내려온 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식약처는 광주 클럽 사고를 계기로 조례가 마련된 자치구를 전수조사해 안전 관리 규정과 의무사항을 신설한 해당 조례 표준안을 만들었다.

서구의회가 남긴 폐지 권고안은 다시 개정안이 되어 의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입법 예고 기간까지 거친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6일 절차상의 문제로 '춤추는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 처리가 연기됐다.

결국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는 의원 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기획총무위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기존 조례와 달리 업소 면적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영업장을 과도하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객석 밝기를 60럭스(1럭스= 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 등이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며 개정안 부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의원들간 입장을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이유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해 8월12일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27일 오전 2시39분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모습.

에서였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서 폐지와 개정 논의를 오가다 사고 5개월 만에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제 다시 공은 서구로 넘어가게 된다. 서구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7월처럼 간담회와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폐지안 또는 개정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중한 검토를 위한 결정이었지만 사고 5개월이 지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조례의 행방조차 결정하지 못한 서구와 서구의회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수개월에 걸친 영업장과의 면담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던 서구 공무원들은 올해 초 인사이드 등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불과 몇 주 전 담당업무를 배정받은 공무원이 처음부터 해당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개정안 마련이 더욱 더더질 것이 분명하고 해가 바뀌고 국민적 관심도 역시 낮아진 올해 조례 행방이 얼마나 진척이 있을 것

인지 우려가 높다. 서구의회 역시 서구가 조례 폐지안 또는 개정안을 마련해 온다 하더라도 "단 한 곳의 영업장을 위한 조례는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와 "논란이 있다고 조례를 무조건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입장치는 있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해당 조례의 폐지가 위법이다, 아니다, 개정안 세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아니다" 등의 원동조차 법률 검토가 되지 않아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한 구의원은 "결국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집행부에서 또다시 조례 개정안을 다듬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의원들 간에도 입장차가 커 쉽사리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9)는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이런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끌 어 온 건 아닌가 싶다. 결국 일반 시민들은 어느 업장이 해당 조례로 운영하는지 모른채 업소를 드나들고 위험에 노출 될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 판결 ●

"의자 바르게 안 앉았다" 학대 유치원 교사 징역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이 앉아있는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제주시에 있는 한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7월5일 오후 1시 쯤 원생 B군(6)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넘어뜨린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군에게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 사과하라"며 다른 아동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행위 등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걸어 뒤로 넘어뜨린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급조단체 내세워 봉안당 폐쇄 명령 미이행 징역

급조한 단체를 내세워 설치한 봉안당에 폐쇄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3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8일 전남 나주시에 B산사라는 명칭으로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고 봉안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2018년 6월28일 대법원에서 B산사는 종교단체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신고가 무효라는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2018년 10월29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나주시장으로부터 B산사 봉안당의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안당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폐쇄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유족들이 봉안함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반환만을 제시했을 뿐 별다른 손해배상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에게 봉안함 반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봉안함 반출요구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것으로 이에 대해 유족들이 거부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봉안당에 대한 폐쇄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형 차량 부수고 비닐하우스 방화 50대 징역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영)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전 3시5분쯤 자신이 찾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친형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형 집 초인종을 쏘고, 차량에 돌을 들어 유리창을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3시56분쯤 형 집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2곳을 훼손하고,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동안 형제들이 면회를 오거나 간식비를 챙겨주는 등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